

IMF의 1996년 세계경제 전망

1. 개관

- 1996년 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이 2.4%의 안정성장을 시현하고 개도국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데 힘입어 4%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선진국 경제는 1991년부터 회복국면에 진입한 미국경제가 1994년을 정점으로 둔화추세를 보이는 반면 서유럽경제가 1994년 이래의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일본경제는 그동안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2%대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일 것임.
- 개도국은 경기진정국면에 진입한 아시아국가의 성장을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6%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체제전환국은 그동안의 경기후퇴에서 벗어나 플러스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물가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각국의 재정긴축 등으로 전년에 이어 2%대 상승에 그치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개도국의 물가도 각국의 안정화 및 개혁정책에 힘

입어 하락추세를 지속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1995년의 19.5%에서 1996년에는 13.0%로 크게 떨어질 전망.

- 주요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미국 등을 제외하고는 경기호전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겠으나 대폭적인 실업률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경기둔화, 일본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의 영향 등으로 실업률이 다소 상승하는 한편 독일 등 EU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등으로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될 전망.
- 세계교역은 개도국의 고성장과 이에 따른 역내교역의 증가 등으로 6%를 상회하는 높은 신장률을 지속할 것이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1995년의 8.0%에 비해서는 낮아질 전망.
- 한편 주요 선진국의 경상수지(GDP대비 비중)는 미국의 적자가 경기둔화 등으로 감축되고 일본의 흑자비중이 엔화 강세 및 시장개방 등에 따른 수입증가로 점차 축소되는 등 선진국간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전망.
- 원자재 가격은 금년의 오름세에서 하락세로 반전하고 유로달러 및 유로엔 금리는 보합. 유로마르크 금리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가. 경제성장

- 1996년중 선진국경제는 일본의 경기회복 가시화 및 서유럽의 경기확장세 지속등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경기둔화로 금년과 유사한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는 1994년을 정점으로 완만한 경기둔화세가 내년에도 이어져 성장률이 2.0%로 낮아짐으로써 경기 연착륙(soft-landing)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
- 日本경제는 확대재정정책 및 금융완화조치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장을 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獨逸경제는 제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출 호조 및 내년중에 실시될 감세조치에 따른 민간부문의 수요증대 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2.9%의 성장을 보여 1994년 아래의 경기회복을 지속.
- 개도국경제는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및 중동국가들의 경기회복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6%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는 건실한 경제운용, 해외투자 및 역내교역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엔高 기조의 퇴조 및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 가중 등 수출환경의 악화로 성장률이 1995년의 8.8%에서 7.8%로 떨어질 전망.
- 중남미는 금년초의 멕시코 폐소화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경제안정화 및 개혁

IMF의 세계경제전망¹⁾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경제성장률					
세계	2.0	2.5	3.6	3.8 (3.8)	4.1
선진국	1.5	1.2	3.1	2.5 (3.0)	2.4
미국	2.3	3.1	4.1	2.9 (3.2)	2.0
일본	1.1	-0.2	0.5	0.5 (1.8)	2.2
독일	2.2	-1.2	2.9	2.6 (3.2)	2.9
프랑스	1.2	-1.5	2.9	2.9 (3.2)	2.7
영국	-0.5	2.3	3.8	2.7 (3.2)	2.9
캐나다	0.7	2.2	4.6	2.2 (4.3)	2.7
개도국	5.9	6.1	6.2	6.1 (5.6)	6.2
아시아	8.2	8.7	8.5	8.8 (7.6)	7.8
체제전환국	-15.3	-9.1	-9.5	-2.1 (-3.8)	3.4
실업률					
선진국	7.7	8.1	8.1	7.6 (7.6)	7.5
미국	7.4	6.8	6.1	5.7 (5.5)	5.9
일본	2.2	2.5	2.9	3.1 (2.9)	3.2
독일	5.9	8.8	9.6	9.1 (9.1)	8.7
소비자물가상승률					
선진국	3.3	3.0	2.4	2.6 (2.6)	2.5
미국	3.0	3.0	2.6	3.0 (3.1)	3.3
개도국	38.7	43.1	48.1	19.5 (17.5)	13.0
체제전환국	730.7	675.2	301.3	147.7 (126.9)	25.4
교역신장률 ²⁾	5.1	3.9	8.7	8.0 (8.0)	6.6
선진국 수입	4.3	1.1	9.2	7.1 (7.8)	5.5
수출	4.2	2.5	8.1	6.9 (8.0)	5.0
경상수지 ³⁾					
선진국					
미국	-1.0	-1.6	-2.2	-2.5	-2.3
일본	3.2	3.1	2.8	2.3	2.0
독일	-1.1	-0.8	-1.0	-0.7	-1.1
개도국					
중국	1.3	-2.0	1.5	1.7	0.3
한국	-1.5	0.1	-1.3	-2.0	-1.6
인도	-1.4	-0.6	-0.4	-1.0	-1.2
체제전환국					
러시아	-1.5	3.4	1.2	-0.2	-1.2
원자재 ⁴⁾ 원유	-0.5	-10.7	-6.5	1.1 (-0.6)	-6.1
기타	-0.1	2.7	10.8	1.8 (· ·)	-0.2
금리 ⁵⁾ 유로달러	3.9	3.4	5.1	6.2 (6.8)	6.2
유로엔	4.3	3.0	2.4	1.4 (2.0)	1.4
유로마르크	9.4	6.9	5.3	4.6 (5.4)	5.2

주 : 1) 국가별 실적치는 각국 정부 발표치

3) 경상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5) 6개월 만기

2) 물량기준

4) SDR기준

6) ()내는 1995년 5월 전망치

정책이 추진되는 데 힘입어 성장률이 1995년 수준(2.4%)를 크게 상회하는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개도국은 외환·무역자유화 등 시장경제형 경제개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 1994년 이래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
- 체제전환국 중 선발전환국들은 그동안의 경제안정화 및 개혁정책의 성과가 점차 나타남에 따라 경기회복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선발전환국들은 과감한 경제개혁과 거시경제균형에 따른 자원배분의 개선, 투자 및 수출 증가등에 힘입어 1995년 (4.0%)에 이어 4%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한편 負(-)의 성장을 지속하였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제국들도 1996년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경제 개혁의 본격화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

나. 고용

- 1996년 중 주요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미국 및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기호전 등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겠으나 대폭적인 실업률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
- 미국은 경기둔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율이 5.9%에 달해 전년(5.7%)보다 다소 높아지고 日本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악화의 영향이 지속되어 1996년에도 실업률이 3% 수준을 상회할 전망.
- 獨逸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은 경기가 호전되는 데다 노동규제 완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제고 등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겠지만 고실업률이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다. 물가

- 1996년 중 선진국의 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이어 2.5%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 임금상승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해 있는 데다 그동안의 달러貨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우려 등이 잠재적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1995년 (3.0%)보다 다소 높은 3.3%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日本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비절감에 의한 가격파괴의 영향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
- 獨逸도 그동안의 마르크화 강세로 수입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통화량(M₃)증가율이 통화공급목표를 하회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995년(2.0%)에 이어 1.9% 상승하는 안정된 수준에 머물 전망.
- 개도국의 소비자물가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과열을 우려한 긴축정책,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안정화정책 등에 힘입어 1995년(19.7%)보다 낮은 13.2%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體制轉換國의 경우 경제개혁정책의 지속으로 超인플레이션現像이 진정되면서 10%대로 낮아질 전망.

라. 세계교역 및 경상수지

- 1996년 중 세계교역은 개도국의 고성장과 이에 따른 역내교역 증가, 체제전환국의 성장 회복 등에 힘입어 6%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개도국의 수출입 물량은 전년에 이어 10% 안팎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는 반면 선진국의 수출입 물

량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 일본의 수출둔화 등으로 5% 정도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 교역신장률은 금년(8%)보다 낮아질 전망.

- 경상수지는 선진국의 경우 주요국간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는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고성장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대 등으로 적자가 확대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美國이 내년부터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日本은 흑자비중이 1992년 이래의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獨逸은 마르크貨 강세 등의 영향으로 적자비중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개도국은 한국, 브라질 등 일부국가들이 긴축정책 등으로 적자비중이 하락할 것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고성장에 따른 수입 증대로 적자비중이 금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3. 정책과제

가. 선진국

- 지속적인 안정성장 및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각국이 재정적자 감축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물가안정 기조를 견고히 하는 한편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먼저 주요 선진국은 대규모 재정적자가 경기조절 능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중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여 정부수요를 민간수요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와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
- 공적 年金基金의 건실화 및 사회보장비 감축 등을 비롯한 중기 재정건전화계획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추진하되 이를 법제화하여 동 계획의 지연을 방지.
-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 면에서도 긴축기조를 강화함.

- 또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업보조금 등을 삭감 내지 철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 특히 여전히 8%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는 EU의 경우 단순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비 축소 등으로 기업의 고용창출 의욕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확대 등 정책적 개선노력이 필요.
- 이 밖에 4년여 동안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日本은 확대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물론 각종 규제완화와 금융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우선적으로 거시경제변수의 조정을 통해 경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엔高 영향이 경제 전부분에 고르게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이 필요.
- 또한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파탄 등으로 실추되고 있는 일본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출채권의 증권화, 예금보험기금의 신축적 운용, 대손상각에 대한 감세 등 광범위한 금융개혁을 추진.

나. 개도국

- 경제안정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장기적 성장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긴요.
- 중국 등 아시아 고성장 국가들은 경기과열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한편 재정균형, 환율절상 등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화 노력을 강화.
-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東 산유국들은 세출 삭감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무역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개혁의 폭을 넓히고 그 추진속도도 가속화.

-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 폐소화위기의 파급효과 (*contagion effects*)에 대처하여 실시해 온 그동안의 경제안정화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경상수지 균형 등 거시경제 안정에 주력.
-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구조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거시경제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환율절하, 무역자 유화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규제완화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함으로써 고성장에 의한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노력을 경주.
- 아울러 금융국제화의 진전 등 국내외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증하는 해외자본의 유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
- 특히 최근에는 자본유입 형태가 공공부문의 대출에서 민간부문의 포트폴리오투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선진국의 경기회복 및 금리상승시 갑작스런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효율화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다. 체제전환국

- 우선 개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경제안정화 및 경제개혁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안정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최근의 자본유입 급증에 따른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고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세출 삭감을 단행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
- 기업민영화, 기업구조조정 및 관련제도의 구축 등 경제개혁을 통해 자금배분을 개선하는 등 시장기능을 확충.
- 또한 대규모 부실채권 등으로 낙후된 금융산업의 건실한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전환을 위한 감독 강화, 신용평가제도의 확립 등 광범위한 금융개혁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 용어의 유래

보이콧(boycott)

현재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노동자가 단결하여 고용주와의 협정을 거절하는 것, 소비자가 단결하여 상품을 사지 않는 것(不買同盟), 수입국이 수출국의 상품을 사지 않는 것」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일랜드에서 한 귀족의 영지관리인이던 퇴역 육군대위 보이콧(Charles Cunningham Boycott, 1832~97)의 이름에서 비롯된다.

이 보이콧이라는 사람은 매우 냉정하고도 완고한 사람으로서, 영내의 모든 농민들이 토지경작을 거부하는 배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자들로 부터도 배척되어 일체의 교제에서 단절당하고 고립되었다. 이때 농민들로 하여금 관리인인 보이콧을 배척하도록 지도

한 사람은, 하원의원이며 이일랜드 민족주의 운동가인 파넬 (Charles Stewart Parnell, 1846~91)이었는데, 농민들은 1879년 「토지연맹」(Land League)을 만들고 파넬의 지도 하에, 아일랜드의 토지는 지주보상제를 통하여 아일랜드 농민에게 귀속시키라고 요구했고, 정치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자치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1880년대에 「보이콧」이라는 사람 이름은, 단결로써 사용자나 판매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투쟁으로 보통명사화 되었다. 이 개념은 후에 프랑스어와 독일어에도 도입되어 오늘날 정치·경제·사회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